

문재인 개혁은 너무 미온적이다

» 관련기사 4, 5, 12면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코드 맞추기



한미정상회담
트럼프와 문재인
코드 맞추는 자리

3면

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정치

6~8면

금속노조의
일자리연대가금
제안

11면

미온적인 문재인 개혁들
건강보험, 국가치매책임제,
핵발전, 특권학교, 비정규직

4~5, 12면

홍콩의
반(反)시진핑
시위

9면

총선 이후
프랑스 정치

10면

대학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 원’ 투쟁에 나서다

학교 당국은 ‘재정 없다’는 거짓말 말라

박혜신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17개 대학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은 올해 1월부터 무려 6개월간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며 사측(대학이 고용한 하청업체)과 교섭을 해 왔다. 그러나 5월 말에 열린 11차 교섭은 사측이 ‘시급 1백 원 인상’안을 제시해 결렬됐고, 이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도 결렬됐다.

쟁의행위는 96.7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다. 서경지부는 조정이 결렬되자, 6월 23일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경고 파업을 벌였다. 또, 대학 분회들은 원청인 각 대학 당국을 항의 방문했다.

쥐꼬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1백 원 인상안을 내놓고 사측이 생색을 내자 노동자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이경자 조합원은 “청소한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 1백 원이라니!” 하며 울분을 토했다.

노동자들의 임금 실태를 보면 이런 분노를 느끼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 대학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는 대부분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일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현재 임금(청소 노동자 기준 시급 6천9백50원)은 2~3인 가구 생계비 평균인 2백70만~3백44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1만 원(월 2백9만 원)으로 올라도 여전히 턱없이 못 미친다.

예컨대, 경비 노동자들은 대체로 2교대제로 밤샘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기본급이 2백만 원을 겨우 웃돌 뿐이



힘들게 장시간 일하는데, 겨우 1백 원 인상이라니 6월 16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서경지부 결의대회

다. 사측은 기본급을 올리더라도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휴게시간에도 필요한 곳에 가서 일해야 한다. 사측이 어떻게든 임금을 적게 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진짜 사장 대학이 책임져라

요지부동인 하청 뒤에는 진짜 사장 원청(대학 당국)이 있다. 많은 대학 당국들이 “[하청] 업체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 그런데 “재정 부담으로 [임금 인상]이 어렵다”고도 한다. 노동자 임금 문제에서 원청의 강제력이 핵심임을 시인한 셈이다.

최경희 전 총장 퇴진 후 당선한 이화여대 김혜숙 현 총장은 ‘춧볼 총장’이라는 호칭을 듣기도 했다. “돈이 실력”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정유라를 비호해 온 이대 당국이 바뀌길 바라는 염원이 크다.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바랐다. 그러나 김혜숙 총장은 약속과 달리 노동자들에게 ‘기다려라’ 하는 말만 반복하며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이화여대 이월·적립금(대학·법인 합산)은 8천4백47억 원에 달한다. 이 돈이 아니더라도, 이화여대 정문부터 죽 늘어선 휘황찬란한 상업시설만 보더라도 학교 당국의 재정 부족 논리가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6월 23일 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이기원 분회장은 “학교가 재정이 없다? 얼토당토않은 소리다. 대학과 기업은 수천억 원을 쌓아 놓고, 왜 노동자들만 쥐어짜는 것이냐!” 하고 꼬집었다. 고려대 김보혁 부총학생회장도 “매년 학교 곳곳에 건물들이 지어진다. 학교가 재정 탓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물가는 오르고 대학 당국의 주머니는 터질 지경인데, 노동자들의 임금은 2~3인 가구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한참 빠듯한 수준인 것이다.

나중 말고 지금

박근혜 퇴진 운동의 중요한 일부였던 노동자들의 삶이 이런데도, 이 운동의 수혜를 입어 당선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친노동’적이지 않다.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도 2020년까지 시행하겠다는 수준이다. 그조차 ‘임기 내 시행’으로 후퇴할 조짐을 보인 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자들도 한꺼번에 다 받아 내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자” 하고 은근히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은 물가 상승에 이르지 못해, 실질임금이 줄어 왔다. 왜 이제껏 저임금으로 고통받아 온 노동자들이 계속 참아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입 개혁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 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자유주의 언론들과 진보진영 일각

은 ‘문재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적폐 세력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다. 그러나 정부는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등의 수단을 쓸 수 있다. 결국 누구의 주머니로부터 재정을 충당할지는 정부가 선택할 문제다. 문재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이유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각 대학에서 투쟁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는 캠페인, 본관 항의 방문, 집회 등을 조직하고 있다.

6월 21일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경비 노동자들은 집단교섭 투쟁을 통해 시급 8백30원 인상을 쟁취했다. 카이스트 하청업체는 악질적이게도 첫 교섭에서부터 도망 다니기 바빴는데 노동자들이 항의해 원청이 면담에 나서게 만들었다.

최저임금도 못 받던 카이스트 경비 노동자들이 꽤 높은 임금 인상을 쟁취하자, 다른 대학 노동자들도 “카이스트 노동자들처럼 우리도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며 고무돼 있다. 이화여대에서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회 10곳,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이화여대 모임, 행동하는 이화인, 사회변혁노동자당 이대분회가 ‘이화여대 비정규직 청소·경비·주차·시설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 연서명’을 공동으로 받기 시작했고 단 하루만에 40개 단체, 2백30여 명이 동참했다.

서경지부는 6월 30일에 열리는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한국 경제 1분기 성장률 상승은 일시적 현상

2017년 1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1.1퍼센트 성장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6위, G20 국가 중 브라질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퍼센트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희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의 한국 경제 성장률 상승세는 수출과 건설투자에 기인한 바가 컸다.

올 1분기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퍼센트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5.3퍼센트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4.3퍼센트 늘었다.

그런데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여름이 온 것은 아니다. 1분기 성장세가 올해 내내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반도체 수출과 반도체 관련 투자 호조는 올해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부담 때문에 건설 경기가 계속 좋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주택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 장비 투자가 4.0퍼센트 감소했고,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 역시 4.3퍼센트 감소했다.

또, 전체 산업 생산도 2월에 0.3퍼센트 줄었다가 3월에 1.3퍼센트 증가하고 다시 4월에 1퍼센트 줄었다(통계청 조사).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더욱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보호무역 강화까지 더하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

올해 1분기의 호실적은 지난 2~3년 동안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세로 바뀌는 변곡점이라기보다는 하락 추세 속에서 나타난 일시적 회복일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한 분기 실적을 놓고 한국 경제의 추세가 바뀐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일 뿐이다.

이정규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5만 원, 2년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예금주(주)프리미디에)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통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구독기간 ☐ 1년 50,000원

☐ 2년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 ws@wspaper.org



신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사드 배치 번복 없다’ 선언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코드 맞추기

김영익

6월 12일 한국 외교에서 예전에는 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베트남 외교부가 대통령 문재인인의 ‘베트남 참전 용사 찬양’이 “베트남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며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 군인들 덕분에 “조국 경제가 살아났다”며 “그것이 애국”이라고 찬양했었다.

문재인인의 ‘애국’ 발언은 베트남인들에게 큰 모욕이고 상처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었다. 그 전쟁에 동원된 한국군이 베트남인들을 학살하는 등 온갖 잔학한 짓을 벌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한국 경제가 특수를 누렸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재인은 베트남인들의 피로 한국 경제를 살 쪼운 과거사를 “애국”이라고 두둔한 것이다.

문재인인의 ‘애국’ 발언은 우파와 미국을 의식한 행위였다. 대선 때 홍준표를 비롯한 우파들은 문재인이 대학 시절에 고(故) 리영희 선생의 베트남 전쟁 논문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한 점을 공격했다. 그래서 문재인은 현충일 추념식 자리를 이용해 우파들에게 ‘내 안보관은 안심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주려 한 것이다.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에 자신이 한미동맹에 매우 충실함을 보이고 싶었을 것이다.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

진보진영 일각은 6월 30일(현지 시각)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한테 “당당한 외교를 펼치라”고 주문한다. 물론 사드와 북핵 문제 해결 등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서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그런 기대가 공연한 환상에 가까움을 암시한다.

핵심은 사드 문제(그리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문제)다. 문재인은 집권 후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보고 누락을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올해에는 사드 발사대 1기만 배치하고 5기는 내년에 배치하는 것이 당초 한·미 합의였는데, 한국 대선 직전 급작스레 사드 발사대 4기가 성주에 배치됐다는 점을 최근 언론에 공개했다.

자민통계열 언론 매체인 <민플러스>는 문재인인의 이런 행보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 유리한 [사드] 협상 조건을 만들려는 의도”나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촉진시키려는 포석”으로 본다.

그러나 ‘사드 보고 누락 사태’ 조사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사드 발사대 배치 진행 과정을 공공 숨기고 청와대에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은 고의적인 것이었고,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충격적”이라고 큰소리쳤지만, 관련자 가운데 처벌받기는커녕 해고된 사람조차 단



“많은 여성들의 기대”를 대신하고 사드 배치를 가정사실화한 강경화

한 명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반발과 지지층 내의 배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시간을 끌고자 했지만, 배치 자체를 번복할 뜻이 없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물론 우파는 법률적 절차 준수조차 참을 수 없어서 호들갑을 떨지만 말이다.

6월 26일 외교부 장관 강경화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서 ‘사드 배치 번복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합의를 번복할 의도가 없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사드 배치 정당성 확보임을 털어놓았다. “민주적·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한다면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주류 남성 엘리트가 아닌 비주류에 페미니스트 여성”인 강경화가 외교부장관이 돼야 한다며 강경화를 적극 편든 세력과 개인들이 진보진영과 여성계에 있었다. 그러나 강경화는 임명되자마자 같은 여성인 성주 소성리 할머니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 그리고 이토록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강경화가 미국이 관장한 한일·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할 수나 있을까?

강경화의 사드 발언은 개인적 의견 피력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자체의 견해라고 보는 게 정확한 관찰일 것이다. 앞서 6월 24일 서울 도심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열려 3천 명(주최 측 추산)이 도심을 행진하고 미국 대사관을 에워쌌다. 그 이틀 뒤에 있는 강경화의 연설은 사드 배치 철회를 바라는 사람들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이었던 셈이다. ‘트럼프와 사드 배치 철회 협상은 없다.’

문재인 청와대 특보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등에서도 트럼프 정부와 코드를 맞추려 한다. 문

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방미 중에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 축소 등을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그를 “엄중 경고”하며 선을 긋기에 급급했다. 문재인은 미국 CBS와 직접 인터뷰하며 문 특보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이며 “연합 훈련 축소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말을 바꾼 것이다. 그는 대선 때 문 특보의 발언과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는 문재인을 이렇게 비판한다. “한·미 양국이 최강의 무력을 과시하면서 북한에게 핵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은 일이 될 것이다.”

문재인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CBS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남북 대화 재개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소망했다.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좀 더 주도적 구실을 하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트럼프 정부와 함께 “대북 제재와 압박을 높여나가는 단계”이고, 북한에 접근하는 것도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재개도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척돼야 가능하다고 해, 남북 관계 개선도 북·미 관계의 상황에 맞추겠다고 했다.

강경화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도 국제적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추진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주도적 구실’을 소망하는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한미동맹의 틀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비판

지난달 문재인이 당선하자 진보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박근혜가 남긴 적폐들이 해결될 기회가 열렸다고 여겼다. “[한반도 긴장 상태를] 타개할 유일한 주체는 문재인 정부뿐”이라는 것이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정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가 당론임에도 사드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를 거의 비판하지 않고 있다. 6월 22일 심상정 대표는 강경화를 만나서 사드 문제를 아예 꺼내지 않았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방 대화 전문 참조). 김종대 의원은 문정인 특보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경고”가 문재인이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의 뜻이라고 헛되이 구분했다(<통일뉴스> 6월 25일치).

자민통계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을 좀체 비판하지 않는다. <민플러스>는 “미국과 한국 보수 집단[이] ... [문재인] 촛불 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 주된 문제라고 보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은 대표의 인터뷰(6월 22일치)를 실었다. 박 대표는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에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지만,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국민의 생각을

완전히 외면할 순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포함한 한미 군사 동맹 강화는 그저 미국의 압력만이 원인인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도 하다. 세계 최강 미국과의 동맹이 한반도와 그 주변의 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근간이라는 데 문재인 정부 자신이 동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촛불 정부”로 보는 견해가 흔하다. 하지만 문재인은 박근혜 퇴진 운동이 정점에 올랐을 때에야 비로소 가세해, 운동 내내 그 운동의 주요 적폐 청산 요구와 거리를 뒀다. 사드 배치 철회는 촛불의 중요 요구였지만, 문재인은 대선 내내 국회 동의 절차 필요성만 말했을 뿐이었다.

6월 24일 서울에서 열린 사드 반대 집회에 모인 적잖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할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대는 빠르게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특히, 지금 문재인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바뀌기 전에 진보 측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큰 것 같다.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사드 반대 운동을 강화하려면,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의 무기”를 지금 버리지 않으면, 막상 절실할 때 녹슬어 쓰지 못할 수 있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20호 2017년 5~6월

특집: 페미니즘과 성 해방

쟁점: 트럼프 집권과 세계 자본주의

특집2: 1987년 6월 항쟁·노동자 대투쟁 3주년

러시아 혁명 100주년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20호 2017년 5~6월

9,000원

이론과 실천의 통일

구입 문의: 도서출판 책갈피 02-2265-6354, chaekgalpi.com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장호중

문재인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이후에도 비정규직, 미세먼지에 이어 치매 대책을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이벤트로 홍보했다. 핵심은 ‘치매지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2백50곳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2천억 원가량을 배정하고 이 재원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인력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노인들뿐 아니라 가족들, 심지어 당장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는 처지가 아닌 사람들조차 치매에 대한 부담은 엄청나게 크다. 기억력과 인지 능력의 장애를 낳는 병이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각종 성격 변화, 우울, 불안, 망상, 환각, 배회, 공격성, 이상 행동, 수면 장애 등 정신행동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재인이 2012년 대선에 건진 부족한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치매에 관해서는 ‘국가책임제’ 같은 개혁적 공약을 들고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요란한 홍보와 달리 문재인이 내놓은 대책은 ‘국가책임제’라 부를 만한 게 전혀 못 된다.

치매지원센터는 치매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각종 정보를(진단을 포함해) 제공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치매 지원 복지가 있지만 그 존재를 알지 못해 마땅히 누려야 할 서비스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치매지원센터가 지금보다 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양질의 공공 요양 시설을 대폭 늘리고, 정부가 요양보호사를 대폭 고용해야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치매 환자 지원 수준이 형편없는 상태에서 정보 제공만으로 개선을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치매 환자가 가족이 아닌 정부나 의료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적용을 받아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양 기관에 입주(입원)해 보호를 받는 경우다.

그런데 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서비스)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주 5일 하루 4시간 이상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누군가

집에 머물러야 하는 셈이고, 없는 경우 종종 사고가 난다. 독거노인의 경우 불안 증상 때문에 밤에 집 밖에 나섰다가 길을 잃거나 경찰의 신세를 지는 경우가 흔하다.

요양 기관의 경우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2.2퍼센트밖에 안 된다. 국공립 비율이 6퍼센트 정도인 어린이집보다 못한 셈이다. 문재인이 방문한 서울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인데 정원 1백50명에 대기자만 2016년 기준 8백 명이었다.

민간 시설은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

로 가족의 처지에서는 그야말로 ‘죽거나 나쁘거나’ 중에 선택해야 하는 일이 흔하다. 그조차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 업체들이어서, 당연히 온갖 부정 수급이 끊이지 않는다. 낸 비용만큼도 못 받는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 전국 장기요양기관 1천28곳을 골라 조사했더니, 대상의 75.3퍼센트인 7백74곳에서 2백35억 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 2017년 6월 4일치) 의사·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 환자를

돌보는 50~60대 여성 요양보호사(간병인)의 노동조건은 무척 열악하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방문 요양보호사 27만여 명이 지난해 한 달 평균 76시간을 일하고 57만 원을 받았다.

그나마도 치매가 얼마나 심한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이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독거노인의 경우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일쑤라는 뜻이다. 고독사가 늘어나는 까닭이다.

이런 식이니 치매지원센터를 늘려도 일자리는 일부 늘어나겠지만 ‘국가 치매 책임’은커녕 작은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엄청난 비용을 멈추려면 정부가 제대로 된 요양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포로수용소나 감옥을 연상시키는 시설이 아니라 적어도 북유럽 복지국가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많은 독거노인들에게 생활수준의 하락이 아니라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지내길 원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1년 3백65일, 대부분의 시간을 돌봐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겠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현재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 데 정부가 지출하는 재정(보험료를 따로 걷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해)은 연간 2천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현재 치매 환자수는 72만여 명이니 이들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도 필요 재원은 14조 원가량으로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이런 해법에 조금도 다가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책임’을 조금치도 믿기 어려운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보험사들의 반발을 뿌리칠까?

김재현

문재인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며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연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자율화 한 보험료 조정폭 규제(±25퍼센트)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즉각 “인위적 가격조정이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 도산할 수 있다며 앓는 소리를 해 낸다.

반면, 비싼 보험료에 불만이 많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인하 유도 계획이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은 틈을 이용해 급성장했다. 지금은 3천3백만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보험료를 강제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하를 ‘유도’하겠



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는한 민간보험 부담은 줄기 어렵다

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 조정폭을 되살려도 약간 제약이 있지만 보험료 인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정책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실손보험 활성화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며 “노인 실손과 유병자 실손을 활성화”하고, 가격 경쟁을

촉진한다며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산”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현재 실손보험은 사실상 포화 상태에 도달해 새로운 시장 개척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그와 달리, 병원에서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실손보험의 필요성을 줄여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률 향상 목표치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대통령령으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상병수당(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제도)도 도입할 생각이 없다. 상병수당 제도는 OECD 국가 중 미국·스위스·한국에만 없는 제도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핑계로 댈다. 21조 원의 흑자가 쌓여 있음에도 2년 후면 적자로 돌아갈 것이라는 재정추계를 내놓는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정부는 급속한 재정 고갈의 주된 원인으로 고령화를 제시하지만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흑자가 누적돼 왔다. 또, 노인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오히려 줄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가 문제라면 그만큼 정부와 기업주·부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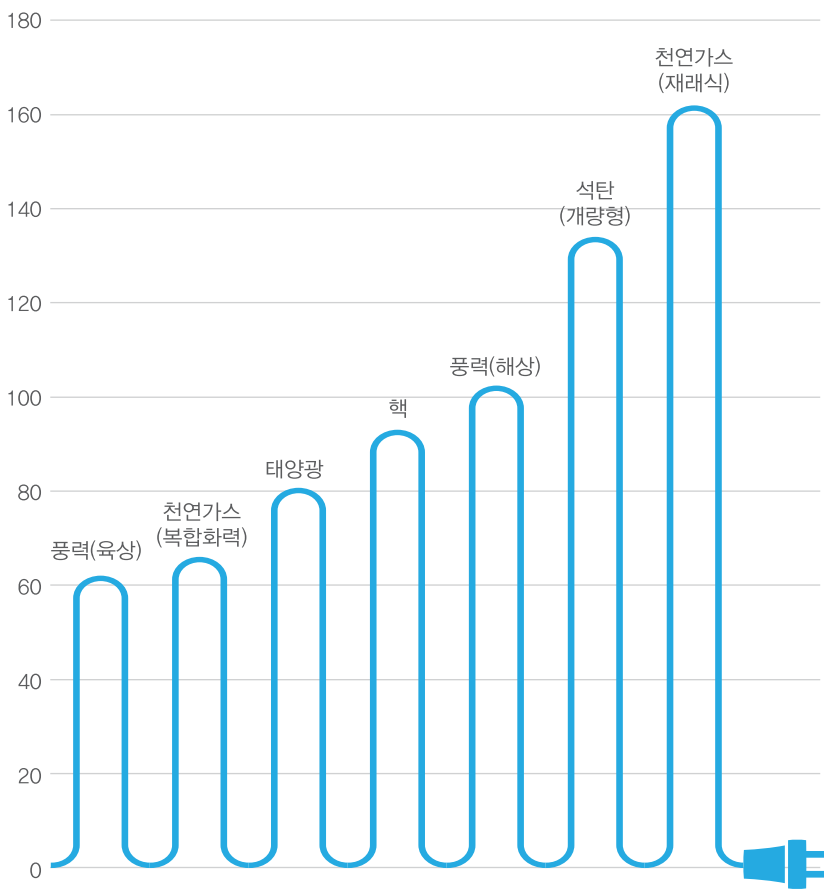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는 의료비 “본인 부담 1백만 원 상한제”를 공약했다. 그런데

정부의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을 보면,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최대 6천30억 원을 투입한다. 그런데 2015년 한 해에만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48조 원가량인데, 건강보험 보장률은 60퍼센트를 간신히 넘는다. 즉, 6천30억 원으로 ‘본인 부담 1백만 원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참 턱없다. 이런 식으로는 공약 폐기가 불 보듯 뻔하다. 또 내년 의료 수가를 2.28퍼센트(8천2백34억 원)나 인상한다고 해, 건강보험료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를 위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통신비 기본료 폐지 공약 후퇴에서 보았듯이 기업주들의 반발을 달래는 식으로는 작은 개혁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보험업가 인하를 추진하려다 제약업체의 압력으로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을 경질했던 김대중 정부의 전철을 문재인 정부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림 1〉 발전원별 전력생산단가 비교, 2015년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단위 £/MWh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열까?

장호중

6월 19일 국내 최초로 핵발전소가 문을 닫았다. 폐쇄된 고리 1호기는 1978년에 가동을 시작해 설계 수명인 30년을 다 채우고도 10년을 연장해 최근까지 가동됐다. 그동안 숏한 사고로 불안을 키워 왔지만 또다시 수명 연장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폐쇄된 것이다. 문재인은 대선 당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연히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보여 주듯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방법은 없다. 반면 사고가 나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해를 낸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그렇게 할 기술력과 재원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탈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설불러 보인다. 애당초 문재인은 한 번도 그런 견해를 분명히 밝힌 바 없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거나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 기약 없이 모호한 말만 했을 뿐이다.

계다가 이런 공약에서조차 슬금슬금 물러서는 모습을 이미 보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했지만 최종 결정은 “공론화”를 거쳐 내리겠다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를 약속했지만 아직 가동을 시작하지 않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를 어떻게 할지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세 기의 신규 핵발전소 설비 용량을 합하면 모두 4천 2백 메가와트로 고리 1호기(5백87메

가와트)의 8배 가까이 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도 핵발전은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고리 1호기 폐쇄가 이후 다른 핵발전소 폐쇄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수명이 다하는 핵발전소가 없다. 그러나 핵산업계는 ‘문재인 임기 동안만 납작 엎드리자’는 정서가 팽배하다. 보수 언론들은 그조차 못 봐주겠다며 벌써 전기요금 폭탄 어쩌구 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

사실 오늘날 핵발전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 같은 것은 없다. 심지어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도 많다(그림1).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탈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 정부가 민간 기업주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자급 능력이나 군사력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석유나 가스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한국 자본가들 처지에서 한 번 확보하면 적어도 수십 년을 써먹을 수 있는 핵연료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 또, 당장은 아니어도 핵폐기물에서 얻을 수 있는 핵무기 원료는 한국의 군사적 잠재력을 키우는 구실을 한다. 주민 소송으로 법원에서 수명 연장 여부를 다루고 있는 월성 1호기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핵발전소다. 설비 용량이 7백 메가와트로 안 되는데도 전임 정부들이 월성 1호기의 수명을 늘리려고 필사적으로 애쓴 이유다. 한국 정부는 얼마 전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한 데 이어 재처리 실험도 추진하고 있다.

탈핵은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적 전망과 만날 때에만 진정으로 실현 가능한 과제가 될 수 있다.

계급 차별적인 특권학교(특목고·자사고)는 즉각 폐지돼야

김현옥 전교조 조합원

6월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외교·국제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전환 시기, 방식, 대상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6월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책간담회 이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내 외교고와 자사고 10곳을 2020년까지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현 교육감 임기는 2018년 6월이다.)

전국 자사고 46곳 중 절반인 23곳, 외교고는 31곳 중 6곳이 몰려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은 외교·자사고를 일괄 폐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당장 6월 28일로 예정돼 있는 자사고 3곳(세화여고, 경문고, 장훈고)과 영훈국제중, 서울외고에 대해 재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공약해 2014년 6월에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직후 오락가락하다 우파에 완패를 당했다. 재지정 여부 대상 자사고 중 한 곳도 폐지하지 못한 것이다. 그 패배의 기억 때문인지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에 공을 넘겼다. 교육감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가 외교·자사고 정

책 방향을 내놓으면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특권학교 폐지와 관련해 지당한 말씀만 했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특권학교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득권 세력은 완강하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6월 26일 집회를 열었다. 일부 외교고와 자사고 학부모 등은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명문대 진학 통로

자사고는 2003년부터 시범 운영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확대한 것으로 성적이 상위 50퍼센트 이상인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를 더욱 서열화하는 한편, 자사고를 크게 확대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외교 31개, 국제고 7개, 자사고 46개가 존재한다. 이 학교 재학생은 6만 8천5백45명이다. 일반고 재학생의 5.5퍼센트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서울대 입학생의 37퍼센트가 외교·국제고·자사고 출신이다. 외교·국제고·자사고가 명문대 진학의 통로가 된 것이다.

이 특권학교들은 고교 서열화뿐 아니라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이다. 특권학교의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에 달한다. 특권학교 입시를 위해 학원, 과외 등 사교육비 부담도 증가했다. 외교고와 국제고에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은 84.5퍼센트이고, 자사고는 90퍼센

트를 넘는다. 외교고와 자사고 준비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다.

또, 부모의 학력, 직업, 지위, 소득 등 가정 배경에 따라 학교 선택에 차이가 발생한다. 2010년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 재학생들의 가정 배경을 아버지의 직업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자사고 지정 이전에 비해 자사고 지정 이후 고소득직과 중소득직의 비율은 증가하고, 저소득직과 무직의 비율은 감소했다.(성기선, ‘자율고의 문은 누구를 위해 열리나: 자율고 1년 실태 보고서’)

국제중-특목고(외고, 자사고, 국제고)-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로 연결되는 서열화 구조는 교육이 계급 상승의 통로가 아니라 계급 고착화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대부분의 노동계급 자녀들은 일반고나 특성화고를 나와 대학 서열이 낮은 대학을 가거나 조기에 취직을 해서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의 노동자로 전락한다.

따라서 계급 차별 교육을 공고히 하는 특권학교는 폐지돼야 한다.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우선순위’로 자사고·특목고 폐지가 42.3퍼센트로 3위를 차지했다.

외고와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학교 등은 법률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됐다. 즉,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시행령을 개정해 즉각 폐지할 수 있는 것이다. 특목고·자사고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



일반고 황폐화를 낳는 특권학교 폐지하라 2013년 전교조 탄압 저지와 특권 경쟁 교육 폐기를 위한 전국 교사대회

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친기업적·친제국주의적 정치

[편집자 주] 이 글은 혁명적 반자본주의 격렬간지 《시류를 거슬러(Against the Current)》(2015년 7월)에 실린 소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 **멜라브 자밀(Mehlab Jameel)**은 파키스탄의 성소수자로, 반제국주의적 포스트식민주의론을 이용해 주류 성소수자 권리 운동에 내포된 모순을 밝히고 있다. 그는 ‘남아 시아’라는 말을 심지어 중동 지역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역과 관련해 독자의 양해를 구할 사항이 하나 있다. 저자 자밀은 주류 성소수자 운동의 정치 자체를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용어법은 부정확한 것이다. 그래서 역자는 ‘친기업’이라는 말로 의역했다. [] 안의 말은 역자의 첨가라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된다.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기 사흘 전인 2015년 6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 등록 이민자이자 트랜스젠더인 한 여성을 백악관 주최 ‘성소수자의 달’ 행사에서 쫓아냈다. 그녀가 미국 국가의 승인 하에 일어난 성소수자 고문과 강제 추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오바마의 연설을 방해했다는 게 이유였다. 오바마는 “여기는 내 집이요. ... 부끄러운 줄 아시오!” 하고 꾸짖었고, 그 자리에 청중으로 있던 동성애자들은 “우리는 오바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연호했다. 이 사건 하나만 봐도 미국 성소수자 권리 운동에 뭘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유색인종이 남성 동성애자로서 오늘날의 상황을 보며 이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더 급진적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던 운동이 어쩌다 자금성 행진과 동성결혼이라는 동화 정책에 갇히게 된 걸까?

먼저, 오늘날 성소수자 권리 운동을 둘러싼 맥락을 살펴보자. 성소수자 권리의 역사를 연구한 존 데밀리오는 동성애자 남성과 동성애자 여성이 항상 오늘날처럼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동성애자’로서의 자의식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19세기에 임금노동이 확산되고 생산이 전문화되면서 섹슈얼리티가 생산 상의 필요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자본주의적 질서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동성 간의 성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제

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로 미국에서 동성애자 자의식이,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기반한 정체성 정치도 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섹슈얼리티 담론은 불가피하게 의학·정신의학 분야와 맞물려 형성됐다. 또한 인간의 성적 경험을 분류하고 이해해야 함에 따라 추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오바마의 연설을 방해했다는 게 이유였다. 오바마는 “여기는 내 집이요. ... 부끄러운 줄 아시오!” 하고 꾸짖었고, 그 자리에 청중으로 있던 동성애자들은 “우리는 오바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연호했다. 이 사건 하나만 봐도 미국 성소수자 권리 운동에 뭘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유색인종이 남성 동성애자로서 오늘날의 상황을 보며 이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더 급진적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던 운동이 어쩌다 자금성 행진과 동성결혼이라는 동화 정책에 갇히게 된 걸까?

우리의 얘기는 1969년 스톤월 항쟁이 마침내 시스젠더[신체적 성과 사회적 성이 일치하는 — 역자] 백인 동성애자들에게 포섭돼 지금의 성소수자 권리 운동으로 전환된 때에서 시작됐다. 실비아 리베라와 마사 존슨 같은 유색인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이끈 스톤월 항쟁은 원래는 경찰 폭력(미국에서 매 우 오래된)에 항의하는 운동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결혼(동성결혼) 요구를 우선시함으로써 사회의 특정 부분에게 유리한 운동으로 바뀌었다. 이 운동에 대한 인기 있는 묘사는 이렇다: ‘하비 밀크 같은 동성애자 정치인이 인기를 얻고, 미국심리학회(APA)가 질병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19세기에 임금노동이 확산되고 생산이 전문화되면서 섹슈얼리티가 생산 상의 필요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자본주의적 질서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동성 간의 성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제

갔다. 그리하여 처절한 투쟁 뒤에 미국의 ‘진보적’이고 ‘각성한’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인기 있는 묘사가 으레 그러듯이 이런 묘사도 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주류가 스톤월 항쟁이 열어젖힌 기회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기 훨씬 전부터 성소수자 해방과 라, ‘이성애’와 ‘동성애’ 같은 용어의 사용이 대중화됐다. 이런 용어들과 이를 섹슈얼리티에 적용하는 일은 19세기 후반 서구 사회에 등장해 ‘동성애자’의 형상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엘런 드제너러스 같은 코미디언(백인 여성)이 전국적 티브이 방송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당시 떠오르던 성소수자 정치 담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이래로 성소수자 권리는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됐다. 많은 기업들이 제휴해서 “무지개 산업”[무지개는 성소수자들을 나타내는 상징 — 역자]을

을 탄생시키고 자금성 행진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소수자 운동의 자유주의적 활동가들은 동성결혼 같은 권리의 평등을 명시하는 법률 제정을 목표로 삼았다. 최근에는 레이디 가가 같은 백인 연예인들이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담론을 유행시켰는데, 이런 것이 미국에서는 ‘진정한 성소수자 경험’으로 규정된다. 오늘날 미국에서 동성애자는 대기업의 사업 기반이 됐고, 언론과 기업은 동성애자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광범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바라 오바마 같은 정치인들이 왜 동성애자들의 표를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 할 뿐 아니라 동성애자 권리를 세계로 수출하려는지는 극도로 명확하다.

제국주의와 차별받는 사회집단

성소수자 권리가 친기업적이 된 방식과 꼭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운동이 세계화된 방식에도 고유의 역사가 존재한다. 2011년 12월 국제 인권의 날 기념 유엔 연설에서 당시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세계적 성소수자 공동체’를 지지한다면서 동성애자 권리를 인권이라고 선언했다. 그래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어떤 사람을 구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선언했다. 또한 성소수자 권리가 ‘보편적’ 권리라고 열정적으로 옹호하면서, 동성 간 특유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성소수자 학대를 용인하는 국가들을 비판했다. 미국이 세계 정치에서 동성애자 권리 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상황을 미국 제국주의의 역사 속에 자리매김해야 한다. 제국주의와 섹슈얼리티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권력과 인종과 젠더, 섹슈얼리티의 이러한 연관을 분석해 해답을 찾으려 하기 전에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성소수자 권리

를 보편화해야 하는 걸까? 성소수자 권리의 보편화를 위한 틀의 기초가 되는 가정들은 무엇이고, 그 가정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억압적 전통에 맞서 성소수자 권리를 제도화함으로써 현대적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노력은 왜 생겨난 걸까? 왜 세계적 성소수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걸까? 세계적 성소수자 공동체는 (만약 존재한다면) 정말로 무엇일까?

에드워드 사이드는 제국주의를 양방향적 시스템으로 규정한다. “종속적 경험 영역에서의 삶에는 지배적 영역의 허구와 어리석음이 각인된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참이다. 즉, 지배적 사회에서의 경험도 [식민지] 원주민과 그들의 영토를 문명화 사명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원주민을 문명화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식민주의의 핵심 개념이다. 가브리엘 스피박 같은 포스트식민주의 이론가들은

사이드의 제국주의 분석을 페미니즘으로 확장해 적용하면서, 천대받는 여성을 식민주의자들이 ‘구한다’는 생각에 주목한다. 식민주의적 페미니즘 담론은 “백인 여성이 유색인 여성을 유색인 남성으로부터 구한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프란츠 파농의 고전적 논문 ‘베일 벗은 알제리’는 무슬림 여성의 전통 복장을 두고 어떻게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이 차별과 관련지었는가, 그리고 무슬림 여성의 전통 복장 벗기기가 어떻게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식민주의적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상황을 미국 제국의 역사 속에 자리매김해야 한다. 제국주의와 섹슈얼리티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권력과 인종과 젠더, 섹슈얼리티의 이러한 연관을 분석해 해답을 찾으려 하기 전에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성소수자 권리

식민주의적 페미니즘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특히 유용해졌고, 그에 대한 밀라 아부 무고드, 찬드라 팔파 모한티, 사바 마무드 같은 저술가들의 비판이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무슬림 여성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테러와의 전쟁’ 위에서 그 전쟁을 추동하는 논리가 됐기 때문이다. 부르크너를 제외한 얼굴과 몸 전체를 가리는 무

슬림 여성의 전통 옷 — 역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에게 강요한 억압적 제도로 간주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탈레반으로부터 구한다며 아프가니스탄 침략 전쟁을 정당화했다. 국제엠네스티 같은 인권단체들은 홍보물을 만들어 이 개입을 지지했다. 부르크너를 착용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등장하는 그 홍보물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토여! 진보가 계속될 수 있게 하라!” 아프가니스탄혁명적여성연합(RAWA)처럼 미국의 개입을 반대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는 묵살됐다. 라파아 자카리아가 적절하게 명명한 이 “B-52 폭격기 페미니즘”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권리라는 대의를 위해 약속했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그 권리를 더 크게 훼손했는데, 이를 보여 주는 증거는 산더미처럼 많다.

제국주의와 제3세계 성소수자 권리 담론

같은 논리가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싼 담론에도 적용된다. 다파 쿠마르가 말하듯이, “오바마 재임 기간에 자유주의는 제국에 훨씬 깊이 엮이게 됐다.”² 조지프 마사드는 스피박의 명제를 확

장해 이렇게 말한다. 유색인 여성(동성애자와 이성애자)과 유색인 동성애자 남성(서유럽, 북유럽, 미국 대도시 거주자들이거나 자신의 모국에서 서유럽·북유럽·미국의 자금을 받는 NGO 운동가들), 그리고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다양한 그들의 백인 동맹자들은 유색인 여성(‘이성애자’와 ‘동성애자’)과 유색인 ‘동성애자’ 남성(제3세계, 그리고 서유럽과 북유럽과 미국에 있는)을 유색인 ‘이성애자’ 남성으로부터 구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는 대규모 산업이 됐다.

제3세계 성소수자들은 억압받는 존재로, ‘해방돼야’ 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런 담론은 ‘공통된 불만을 내세워’ 세계적 성소수자 공동체라는 담론을 자체적으로 창조했다. 그러나 사실 동일한 박해 경험을 공유하는 세계적 공동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성애자 무슬림 남성은 동성애 혐오적이고 트랜스젠더 혐오적인 자들로 악마화되고, 통제되고 제지돼야 할 ‘그자들’로 묘사된

다. 보편적인 성소수자 권리라는 관점을 받아들이라고 각국을 압박하고, 미국을 우세한 지위에 앉히려고 “이슬람 국가(IS), 동성애자들을 살해하다”, “이란, 동성애자 남성을 교수형에 처하다”는 제목의 글이 국제적 언론에서 유통된다. 많은 이성애자 무슬림 남성이 동성애 혐오를 하지 않는거나 이슬람국가가 동성애자들을 살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런 박해의 이면에는 구체적 맥락이 있고, 또 제국주의의 입장을 거드는 뉴스들이 제작·보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제3세계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상처를 말할 때조차 영향없이 자유주의적 구세주 복합체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조지프 마사드가 “게이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르는 성소수자 권리 옹호 국제 인권단체 네트워크는 무슬림 성소수자들을 그들의 억압적 전통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가정에 따라 활동한다. 게이 인터내셔널은 국제 언론에 등장하는, 스스로 성소수자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온 좋게 구출된 사람들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2005년 이란 마사드 시에서 소위 “동성애자” 이란 청년 두 명이 공개 교수형에 처해진 사건을 두고 영국이 본격적인 단체 ‘본노하라!’와 프랑스가 본격적인 단체 아이다호(IDAHO)가

반응한 방식이 그 사례이다. 이 공개 교수형에 대한 항의와 비난을 요구하는 국제적 호소가 있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 본부를 둔 성소수자 권리 단체 일부가 이 호소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중에 국제엠네스티는 해당 남성들은 13살 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때까지 14개월 동안 수감돼 있었다고 보고했다.³

공개 교수형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란만이 “동성애자” 혐오 범죄를 벌이는 국가로 비난받아야 할 유일한 국가인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 하필 이란일까? 왜 하필 그때였을까? 아부 그라이브 감옥에서 학대 사건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도, 바그람 감옥에서 유색인이 고문과 강간을 당했을 때도 게이 인터내셔널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듯 어떤 몸과 어떤 섹슈얼리티가 ‘보호돼야’ 하는지, 어떤 동성애



“동성애 인권”을 앞세운 제국주의 전쟁 정당화를 좌시해선 안 된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 중인 미군 기지에서 게양되는 무지개 깃발

혐오 무슬림이 문명화돼야 하는지를 지배적 강대국이 선택한다는 점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범죄를 국제적으로 비난하자”는 동원 호소에는 제국주의적 논리가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당시 이란이 국제적 비난 대상이 된 것은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여성의 복장과 여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 — 역자,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성소수자인 ‘두 영혼(Two Spirit)’, 식민지가 되기 전 멕시코의 성소수자 ‘무예(muxe)’는 식민지 시대 전에도 존재했다. 그리고 이런 성소수자들과 관련된 복잡한 역사와 경험은 말소된 채 그저 ‘트랜스젠더’ 항목에 묶여놓여진다. 그들의 생각이나 자기 규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말이다. 물론 사람들은 ‘트랜스젠더’라는 규정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성소수자 권리 담론을 토착문화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성소수자라는 자의식을 말소해 버린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구세주 사명은 제3세계 나라들의 현지 맥락을 제멋대로 무시하며, 그 나라 정치와는 분리된 운동으로서 ‘성소수자 권리’를 제시한다. 필자는 다른 사례도 있다. 몇몇 유럽 나라들에서는 시민권을 신청한 무슬림에게 동성애자들이 키스하는 사진을 보여 주고 그 반응을 살펴보는 ‘게이 테스트’가 시행된다.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담론이 이 문명화 사명론의 핵심을 이룬다. 그래서 무슬림 나라들에서 ‘천대’ 받고 ‘박해’받는 성소수자 청년들을 구출하자고 호소한다. 조지프 마사드가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바로 게이 인터내셔널 담론 자체가 동성애자가 없는

곳에서 동성애자를 만들어 내고 있고, 게이 인터내셔널의 성적(性的) 인식론에는 포함되지 않는 동성 간 애정교행 등을 억누르고 있다.” 예를 들어, 남아시아의 히즈라[남아시아에서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여성의 복장과 여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 — 역자,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성소수자인 ‘두 영혼(Two Spirit)’, 식민지가 되기 전 멕시코의 성소수자 ‘무예(muxe)’는 식민지 시대 전에도 존재했다. 그리고 이런 성소수자들과 관련된 복잡한 역사와 경험은 말소된 채 그저 ‘트랜스젠더’ 항목에 묶여놓여진다. 그들의 생각이나 자기 규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말이다. 물론 사람들은 ‘트랜스젠더’라는 규정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성소수자 권리 담론을 토착문화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성소수자라는 자의식을 말소해 버린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구세주 사명은 제3세계 나라들의 현지 맥락을 제멋대로 무시하며, 그 나라 정치와는 분리된 운동으로서 ‘성소수자 권리’를 제시한다. 필자는 다른 사례도 있다. 몇몇 유럽 나라들에서는 시민권을 신청한 무슬림에게 동성애자들이 키스하는 사진을 보여 주고 그 반응을 살펴보는 ‘게이 테스트’가 시행된다.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담론이 이 문명화 사명론의 핵심을 이룬다. 그래서 무슬림 나라들에서 ‘천대’ 받고 ‘박해’받는 성소수자 청년들을 구출하자고 호소한다. 조지프 마사드가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바로 게이 인터내셔널 담론 자체가 동성애자가 없는

행위자를 때때로 처벌했지만, 그때까지 존재한 균형점을 완전히 파괴한 것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히즈라를 범죄자 계층으로 낙인 찍고 동성애를 범죄로 만든 것이었다.(당시 동성애를 범죄화한 법은 지금도 형법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남아시아인들의 성적 경험, 애정 관과는 별개인 특정 행위로서 남아시아의 ‘동성애’를 창조했다.

급진성을 버린 성소수자 운동 주류 정치

1백 년 전에는 동성애 행위를 범죄화함으로써 우리를 ‘문명화’하려 애쓰는 구가 현재는 애초에 자신들이 범죄로 만든 동성애 행위를 비범죄화함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아만인’으로 만들고 자신들에게 우리를 교정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면서 우리를 문명화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참으로 알맞다. 훨씬 더 알맞은 것도 있다. 바로 미국 국가가 동성결혼 인정을 이용해 제3세계 나라들보다 더 ‘진보적인’ 나라인 척하면서도, 인종차별, 계급차별, 노숙인, 폭력, 건강보험, 교육, 강제추방, 수감자 학대 문제 등 성소수자들에게 긴급한 문제이고 활동가들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동성결혼을 인정해 주는 것만큼 득을 가져다 주지 않거나, 그만큼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동성결혼 인정을 하잖게 여기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동성결혼

▶ 8면으로 이어짐



2017년 6월 25일 미국 시카고 자금성 행진을 기로하고 자금성 행진의 기업화와 경찰 참여, 이스라엘의 ‘핑크워싱’을 비판한 활동가들. 이들은 스톤월 항쟁의 급진성을 되찾자는 의미로 실비아 리베라(오른쪽)와 마사 존슨(왼쪽)의 두상을 들고 행진했다

사진 출처: Leah Dowd/REUTERS



힐러리 성소수자 운동의 동맹일 수 없다

▶ 7면에서 이어짐

인정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정치를 지우려 해선 안 된다. 즉, 어떻게 동성결혼이 성소수자 단체 재정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됐고, 어떻게 동성결혼이 자본주의에 통합됐고, 어떻게 기업들이 성소수자 운동을 가로채어 득을 보는가, 또 어떻게 동성애자 권리 운동의 주류가 인종차별을 나타내며 제국주의에 영합하는가 하는 점들을 깨달아야 한다. 동성결혼의 입법 덕분에 국가는 성소수자의 신체를 제어하고, 성소수자의 섹슈얼리티와 성적 지향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또, 권리가 전혀 없는 부류의 성소수자들이 느끼는 분노도 가려진다. 성소수자들이 인종차별적 폭력과 빈곤 때문에 죽어 나가는데도 많은 단체들이 동성결혼 허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재정을 돌리기 때문이다.

동성애 권리 운동의 주류는 애플의 최고경영인 팀 쿡 같은 인사들이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힐러리 클린턴 같은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핑크 워싱'하며 그 이미지를 선거운동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그런 운동은 권리가 전혀 없는 부류의 성소수자들의 말을 차용하면서도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동성애 권리 운동의 등장을 낳은 항쟁[스톤월]이 유색인자 트랜스젠더인 노동계급 여성의 주도로 경찰 폭력에 맞서 일어난 것이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의 피해자 중 72퍼센트가 트랜스젠더 여성이고 89퍼센트가 유색인이기 때문이다.⁵ 동성결혼 인정은 특권층 성소수자들에 대한 경계심을 쉽게 흐트러뜨린다. 이들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일조하고, 도시 빈민가 철거에 앞장서고, 수감자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 군대에 장교로 임관해서 죄없는 민간인을 살해해 그 시체의 일부를 전리품으로 수집한다.⁶

성소수자 해방을 위해 싸우는 남아시아 활동가들은 성소수자 권리가 사회의 지배적 구조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성소수자 권리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통합된 것과 꼭 마찬가지로, 권리에 대한 이런 접근법은 다른 억압적 구조를 재생산한다. '퇴폐적' 성소수자는 한때 '진정한 미국 문화'의 오점으로 여겨졌다. 성소수자들이 매우 많은 자유주의적 프로젝트들을 통해 순치되고 주류로 포섭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제 '동성애자'는 미국 문화의 일부로 자리잡았고, 성소수자들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가의 헤게모니에도, 국가가 뒷받침하는 인종차별, 자본주의, 제국주의 같은 억압 구조에도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성결혼 인정은 감옥/산업 복합체, 국가 헤게모니, 자본주의, 인종차별, 제국주의 폐지 등 훨씬 급진적인 요구를 하던 성소수자들을 순치시키는 데 유용했다. 국가에 의한 동성결혼 입법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성소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애자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가져서 행복하게 되는 것밖에 없다.' 모범적 동성애자인 성소수자, 특히 인종적으로 다양한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백인 도시 아빠들이 애국주의적 프로젝트의 홍보 모델이 된다. 자스비르 푸아르는 처음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 "B-25 폭격기 페미니즘"은 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목섰했다

으로 이런 현상을 '동성애자 애국주의'(homonationalism)라고 불렀다. 이렇게 기존 사회에서 용인되는 (동성애자 애국주의적) 성소수자들은 억압적 구조에 도전하기보다는 그것의 일부가 되고, 미국이 제3세계 나라들의 '동료 동성애자'들을 해방시킨다며 해외에서 벌이는 전쟁을 지지하고 후원한다.

'동성애자 애국자'들이 동성결혼에 앞서 매달린 쟁점은 미국의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 정책이었다. 이 정책을 폐지해 동성애자들이 미군에 속해 제국주의 정책에 가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수많은 활동을 벌이고 기업들이 돈을 댔다. 미군은 '테러리즘'에 관한 매우 인종차별적 담론을 내세워 유색인들을 강간·고문·살인한 것을 정당화한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그런 군대의 일원이 되는 것을 통해 '애국 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평등'이란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식이 열리는 식당과 이슬람 교육시설을 폭격할 기회가 있음을 뜻한다. 이런 식의 애국적 단결을 지지하는 상징으로서 무지개 깃발과 성조기가 도처에서(예컨대 동성애자 클럽, 동성애자 헬스 클럽, 동성애자 데이트 웹사이트) 나란히 내걸린다. 9·11 이후 이런 움직임은 '테러리스트 무슬림'을 전국적으로 배제하려는 체계적 시도의 일부가 됐다. 미국 동성애자들 사이에 퍼진 무슬림 혐오와 인종차별은 미국 국가의 '테러 대책'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데, 바로 이를 통해 미국 국가는 약 20년에 걸쳐 제국주의 전쟁을 벌여 무슬림 4백만 명을 살해했다.

동성애자 애국주의의 가장 끔찍한 형태는 아마도 이스라엘(미국의 최대 동맹 중 하나)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성소수자 권리 운동을 앞세워 자신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자행하는 인종청소를 정당화한다. 이스라엘을 '동성애 천국'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동성애 혐오 아랍인'으로 묘사하는 온갖 홍보와 광고를 동원하는 '핑크 워싱'이 판을 친다. 또한 성장하는 동성애 관광 산업으로 벌어들인 '핑크 머니'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자금으로 쓰인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남아시아 성소수자들이 수십 년 동안 증오 범죄와 국가 탄압에 시달린 경험을 낮추거나 지우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과거·시라, 히즈라, 스스로 성소수자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겪는 괴롭힘, 비난, 경제적 불이익, 성매매 납치, 성폭력, 살해 위협은 매우 실질적이다. 그러나 남아시아 성소수자 운동가들은 현지 상황에 맞지 않는 관점에 현실을 꿰어 맞추거나 동성애자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것이 오히려 현지 운동에 해를 끼칠 뿐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에릭 포슈너는 오늘날의 인권 모델을 상세하게 비판한 논문에서,⁷ 사람들에게 '해방'이라고 가르치려 드는 상의하달식 인권 모델이 제3세계 나라들에서 끼친 해악이 득보다 더 크다고 지적한다. '[남아시아의] 동성애 혐오 전통'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는 과거의 식민 지배 경험과 게이 인터내셔널의 핑크 워싱이라는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한다. 파키스탄의 경우,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을 강화한 것이 미국이 후원한 군부 독재라는 사실을 봐야 한다. 미국의 인권 산업은 세계 각지에서 동성결혼 등 차별 폐지 입법을 앞세워 현지의 성소수자 해방 운동에 개입할 기회를 얻었다. 그런 개입을 이용해 현지 활동가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양성하고, 현지 성소수자들의 운동을 낚아채고, 그 투쟁들을 현지의 맥락에서 떼어 내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권을 지향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 전까지 현지 운동이 이룬 성과를 위태롭게 만든다. 우리는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이 주최한 단 한 차례 성소수자 자금심 행사가 야기한 피해에서 여태껏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무지개 산업이 세계화하고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제3세계 나라들에서 더 많아지면서 주류 성소수자 활동가들, 그들과 동맹을 맺은 남아시아의 활동가들은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친기업적 접근법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방식은 성소수자 권리 문제를 계급, 카스트, 인종, 종파, 국적 문제와 동떨어진 예외적인 운동으로 묘사한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인도의 한 여성



역겨운 워싱 2017년 6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내 주한 미국 대사관 부스

이 일간지에 동성애자 사위를 구한다는 광고를 내면서 특정 카스트를 선호한다고 명시한 것이나,⁸ 의류업체 아눅 에스닉이 자사 광고에서 레즈비언 커플을 출연시킨 것이 대표적이다.⁹ 이런 광고가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던 성소수자들을 '대변한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들을 '대변'하는 주체는 저임금 노동력 착취의 책임이 있는 기업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날 그런 식으로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것은 그것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때문, 오직 그 때문이다.

이런 친기업화는 성소수자 해방이라는 정치적 대의를 '소수자 권리' 보장 문제로 바꿔치기하고, 이는 특권층만 이롭게 할 뿐이다. 이제 성소수자 권리 담론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계급 불평등, 성차별, 카스트, 인종차별 같은 문제들과 동떨어진 것인 양 통속화된다. 남아시아 성소수자 운동은 예컨대 동성결혼 같은 쟁점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고, 각종 억압 구조들이 서로 연관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성소수자 해방 운동과 국제 연대는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 과정은 모든 형태의 구조적 사회 폭력에 성소수자들이 집단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해방은 모든 사람이 해방될 때만 가능하다.

출처: 《시류를 거슬러(Against the Current)》
2015년 7월 6일자

¹ Rafia Zakaria, 'B-52 bomber feminism: The invasion of Afghanistan did little to liberate its women', *Aljazeera America*, 3 January 2015, <http://america.aljazeera.com/opinions/2015/1/afghanistan-feminismnatooccupation.html>

² Deepa Kumar, 'Imperialist feminism and liberalism', *Open Democracy*, 6 November 2014, <https://www.opendemocracy.net/deepa-kumar/imperialist-feminism-and-liberalism>

³ Amnesty International, 'Iran continues to execute minors and juvenile offenders', 22 July 2005, <https://web.archive.org/web/20060108020601/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MDI130382005>

⁴ Melab Jameel, 'Being queer was not always a crime in Pakistan', *Dawn*, 29 September 2014, <https://www.dawn.com/news/1135082/being-queer-was-not-always-a-crime-in-pakistan>

⁵ National Advocacy for Local LGBTGH Communities, *National Report on Hate Violence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and HIV-Affected Communities*, 29 May 2014, http://avp.org/wp-content/uploads/2017/05/2013_NCAVP_HVReport_MR.pdf

⁶ Chris McGreal, 'US soldiers 'killed Afghan civilians for sport and collected fingers as trophies'', *The Guardian*, 9 September 2010,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0/sep/09/us-soldiers-afghan-civilians-fingers>

⁷ Eric Posner, 'The case against human rights', *The Guardian*, 4 December 2014, <https://www.theguardian.com/news/2014/dec/04/-sp-case-against-human-rights>

⁸ 'India's first 'gay groom' wanted ad has a caste preference', *Aljazeera*, 20 May 2015, <http://stream.aljazeera.com/story/201505201332-0024775>

⁹ Lydia O'Connor, 'Emotional Ad Starring Lesbian Couple Challenges India's Anti-Gay Laws', *Huffpost*, 6 November 2015, http://www.huffingtonpost.com/2015/06/11/india-lesbian-ad_n_7565428.html

반제국주의 연대를 실천한 시카고 자긍심 사전 행진 주최측

6월 24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다이크 행진”에서 주최 측은 옮겨도 시온주의자 3명의 참가를 막았다. (“다이크”는 원래 여성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용어였으나 그들 자신이 적극적으로 전용하기도 한다.)

주최 측은 이 행사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시온주의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시온주의자들이 들고 온] ‘다윗의 별’ 깃발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위협적”이라며 해당 깃발을 들고 행진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시온주의자들이 성소수자 해방을 내세워 자신을 미화하는 위선에 통쾌하게 한 방 날린 것이다!

시온주의자들과 이스라엘 로비단체들은 즉각 주최 측이 “유대인을 배척”했다고 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류 제국주의적 건국 이데올로기인 시온주의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노엄 촘스키, 노먼 핀켈슈타인 등 많은 유대인들도 비판하는 정치 사상이다. 시온주의 비판을 유대인 배척이라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주최 측은 옮겨도 “우리는 반유대인이 아니라 반시온주의다”라고 반박했고, 이 날 행진에는 시온주의 반대, 팔레스타인 해방 기조에 동의하며 참가한 유대인 성소수자 참가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이스라엘의 ‘핑크 워싱’을 비판해 온 많은 진보적 성소수자들과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들은 크게 반기며 주최 측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미국의 가장 큰 성소수자 단체이자 로비단체인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 이하 HRC)은 시카고 조직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HRC는 성소수자 권리 침해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

안타깝게도, 다음 날인 6월 25일 역시 시카고에서 진행된 더 큰 규모의 자긍심 행진(별도 주최)에서는 이런 진취성이 반복되지 못했고 오히려 흑인 트랜스젠더 등 약 40명에 의해 가로막히는 일이 벌어졌다. 그 활동가들은 성소수자 운동 주류가 급진적 전통에서 멀어졌으며 스톤월 항쟁을 이끈 유색인 트랜스젠더 여성들인 실비아 리베라와 마샤 존슨의 모형을 들고서 경찰의 흑인 살해와 자긍심 행진의 기업화를 비판하고, 트랜스젠더 문제를 더 비중 있게 다룰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워싱턴D.C.의 자긍심 행진에서 ‘정의 없이 자긍심 없다’ 활동가들이 제복 경찰의 행사 참여, 군대 후원금 등을 비판하며 가로막은 것과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된 것이다.

성소수자 운동 내 친제국주의·친기업 정치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금, 한국의 성소수자 해방 운동도 초기의 급진적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김종환



사진 출처: sarah-ni

성소수자 해방과 팔레스타인 해방을 결합시킨 6월 24일 시카고 “다이크” 자긍심 행진 팔레스타인 깃발(왼쪽)을 들고 행진 중이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이집트: 강화된 정치 탄압은 지배자들의 위기감을 보여 준다

★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기: 성주 사드 배치 반대와 미 대사관 참여 허용은 병행할 수 없다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 회피

★ 정유라는 왜 구속돼야 하는가?



2014년 우산 운동 당시 거리로 나선 홍콩 시민들

사진 출처: sarah-ni

홍콩 반환 20년 민주적 권리 후퇴, 빈부격차로 대중의 불만이 쌓이다

이정구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7월 1일 홍콩 반환 20주년 대회와 홍콩특구 내각 취임식에 참석하는 동안 홍콩인들의 축하를 고사하고 시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2014년 우산 운동(민주화 요구 점거 운동)의 주역인 데모시스토당을 포함한 홍콩 민주화 운동 단체들이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들은 7월 1일이 민주화 항쟁의 날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홍콩 경찰은 광둥성 경찰과 함께 3개월 전부터 “국가 지도자들의 도착을 준비하는 정화 작전”으로 8천여 명을 체포했다. 그리고 시진핑이 방문하는 동안 우산 운동, 천안문 항쟁 28주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이 터져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홍콩 반환 20주년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중국 정부는 반환 뒤에도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약속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홍콩의 중국화가 급속도로 추진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시민적 권리는 축소되고 빈부격차는 확대됐다.

2014년 10월 우산 운동을 촉발시켰던 한 요인은 행정장관과 입법회(시의회) 직선제 요구였다.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2014년 8월 중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후보추천위원 1천 2백 명 중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들에게만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의결했다. 후보추천위원들은 친중국 성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친중 인사가 행정장관에 임명될 수밖에 없다.

친중과 캐리 램은 경쟁자인 존 창(온건 친중파)에게 여론조사에서 20퍼센트 뒤졌지만 간접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행정장관이 됐다. 선거 직전인 2017년 2월 5일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 장덕장은 “캐리 램 후보는 중국공산당이 지지하는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캐리 램은 우산 운동 동안 정부사관(총리격)으로 있으면서 우산 운동을 강경 진압해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인물이다. 그가 행정장관으로 당선한 바로 다음 날인 3월 27일 홍콩 정부는 2014년 우산 운동의 지도자들을 소란 선동 등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통튀완 서점 사건이다. 2015년 10월 린룽지를 비롯한 서점 주주와 경영자 등 5명이 반중(反中) 내용의 서적을 펴내 중국에 유통시켰다는 혐의로 중국 공간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실종됐다가 돌아왔다. 이 서점은 중국공산당 내부 비사와 시진핑 등 지도자들의 권력 암투 등을 다룬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한다.

홍콩 반환 20년 동안 홍콩 국내총생산(GDP)은 82퍼센트 증가했고, 1인당 GDP도 60퍼센트, 교역 규모는 1백47퍼센트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과실을 누가 차지할지가 진정한 문제다. 대중국 교역 비중이 20년 전 36퍼센트에서 현재 50퍼센트로 늘어나면서 홍콩 금융인과 기업인들은 투자와 금융 허브 지위 등으로 큰 이득을 얻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와 박탈감을 느낀다.

중국 자본이 홍콩에 들어오면서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지난 20년 동안 1백12퍼센트 상승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 그 때문에 2016년 11월 홍콩의 지니계수(클수록 불평등)는 1945년 이래 최대치인 0.539를 기록했다. 특히 젊은이들의 좌절감이 심하다. 최근 홍콩 기업들마저 중국에서의 사업을 위해 북경어(보통어)를 쓰는 중국인들을 선호해, 광둥어를 쓰는 평범한 홍콩 젊은이들은 저임금 직종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좌절감이 우산 운동 때 홍콩 대학생과 고교생 1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요구하며 점거와 시위를 벌인 이유 중 하나였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중국 정부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정작 대중이 자기 대표를 자기 손으로 선출할 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공산당의 의중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이 간접선거로 홍콩 행정장관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것을 보라.

오늘날 중국 지배자들에게는 홍콩의 운동을 단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는 억압당하고 그래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들이 있다. 티베트와 신장의 위구르족이 대표적이다. 중국 지배자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에 떠밀려 자치와 민주주의를 허용한다면 그 파장은 티베트, 신장위구르, 네이멍구 등 소수민족 자치구에도 미칠 것이다.

또한 홍콩은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광둥성 내에 있고, 그 성도인 광저우와 인접해 있다.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이 거대하게 벌어지면, 그 여파가 인근에 위치한 제조업 중심지 광저우와 둥관 등지의 노동자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 경제 위기로 임금 삭감과 해고 위험, 노동권 무시에 항의하는 노동 분규가 갈수록 많아져 중국 지배자들은 이미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1920년대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1920~21년 홍콩에서 최초로 벌어진 파업에 광저우의 노동자들이 큰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영국의 탄압을 피해 홍콩을 빠져 나온 노동자들이 광저우를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다. 1925년 5월 30일 운동은 그 반대 과정을 보여 줬다. 상하이에서 일어난 파업 물결이 광저우와 샤먼을 거쳐 홍콩으로 확산됐다. 홍콩에서 생겨난 파업위원회가 사실상 제2의 정부 구실을 했다.

1920년대 초반의 중국공산당은 이런 투쟁의 연대와 확산을 크게 기뻐했지만, 오늘날의 중국공산당은 이런 전통을 아주 끔찍하게 싫어한다. 시진핑의 홍콩 방문에 이어 중국 유일의 항모인 라오닝함이 홍콩에 기항하는 것은 홍콩 민주화 운동 세력을 겨냥한 일종의 무력 시위다.

엄혹한 탄압조차 민주화 운동과 노동자 투쟁을 잠재우지 못했음을 중국 현대사는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런 투쟁은 중국 사회가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프랑스

“마크롱은 역대 가장 약한 대통령일 것”

이 글은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소속의 사회주의자 바니나 주디첼리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과 한 인터뷰를 근거로 차승일 기자가 작성한 것이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 마크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제5공화국이 시작된 1958년 이래 가장 약한 대통령일 것이다.”

얼마 전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소속의 사회주의자 바니나 주디첼리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주디첼리는 대선과 총선이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점, 마크롱과 그의 신당 ‘전진하는 공화국당’(레퐁블리크 앙마르슈)이 전체 유권자의 15퍼센트 정도의 지지만을 받은 점, 마크롱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절반이 마크롱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더 나쁜 후보(국민전선의 르펜)의 당선을 막으려고 그에게 투표했다는 점, 마크롱의 노동계약 등에 맞선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말했다.

주디첼리의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에마누엘 마크롱은 대통령에 취임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장관 인선 문제로 혼란을 치르고 있다. 법무부장관, 유럽담당 장관, 국방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비리 의혹으로 줄줄이 사퇴한 것이다.

게다가 마크롱 자신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사회당 정부 하 경제산업부 장관 시절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다. 같은 사건으로 신임 노동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중도의 몰락

마크롱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기성 정당들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불만 덕분이었다. 친기업 중도우파 정당인 공화당은 대선 때는 3위에 머물러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총선 때는 17퍼센트를 득표해 지난번 총선 때보다 득표율이 10퍼센트포인트 줄었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중도



올해 1~4월 프랑스에서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백만 일이나 됐다

좌파 사회당이다. 사회당은 대선에서 6퍼센트밖에 득표하지 못해 5위로 밀렸다. 총선에서도 7퍼센트밖에 득표하지 못했다. 2012년 반긴축 연원에 힘입어 집권했다가 오히려 노동법을 개악하는 등 배신한 것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 파업과 청년 ‘밤샘 시위’가 강력하게 일어났다.

기성 정당들의 위기에 대응해 마크롱은 신당을 창당하고 “좌도 우도 아닌” 젊고 활력 있는 “새 정치”를 표방했다.

그러나 주디첼리는 마크롱의 정치가 전혀 새롭게 없다고 지적한다. 그의 정책은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자적이고 제국주의적이다. 법인세 인하, 공공부문 일자리 12만 개 감축, 6백억 유로(약 75조 원) 규모의 긴축재정 실시, 노

동시간 규제 완화, 경찰 1만 명 증원,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이라크 · 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섬멸 전쟁 수행 등.

주디첼리는 공화당 출신자인 에두아르 필립을 총리로 기용한 것도 마크롱의 정치가 오른쪽으로 향한 것임을 뜻한다고 지적한다.

대선 때 나치 정당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결선에 진출했음에도 (나치 후보가 먼젓번에 대선 결선에 진출한 2002년과 달리) 투표율이 떨어지고 무효표 · 백지표가 많이 나온 것은 프랑스 유권자들이 마크롱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직감적으로 알아봤다는 뜻일 게다. 당시 기권표 · 무효표 · 백지표는 합쳐서 36퍼센트나 됐다.

기성 정당과 긴축재정에 대한 반감

은 급진좌파 장뤽 멜랑송이 대변했다. 주디첼리는 “지난해 노동법 개악 반대 운동에 참가했던 사람의 다수가 멜랑송의 선거운동에 일체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멜랑송이 대선에서 7백만 표를 득표한 배경이다. 총선에서 그의 정당 ‘불굴의 프랑스’는 지난번 총선 때보다 70만 표 이상을 더 득표해 17석을 차지하고 원내교섭단체가 됐다.

급진좌파 멜랑송의 성장

최근 멜랑송은 “대통령은 사회적 약행을 저지를 권한이 없다”면서 정부에 맞서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주디첼리는 멜랑송이 ‘세속주의’에 대한 (프랑스 좌파의 오래된) 오해를 받아들여 무슬림 혐오와 인종차별을 둘러싼 문제에서 잘못된 견해를 취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한다. 멜랑송이 선거 유세 때 프랑스 국기를 나눠 준 것이 그의 약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럼에도 멜랑송이 마크롱에 맞서 겹다며 반긴축 정서를 대변하는 점을 사죄, 반자본주의신당은 총선에서 멜랑송 지지를 선언했다.

주디첼리는 노동조합 상층 간부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강력한 투쟁을 조직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그 때문에 생겨난 정치 위기로 프랑스 지배계급도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래로부터 저항의 가능성

주디첼리는 특히 지난해의 노동법 개악 반대 노동자 파업과 청년들의 시위가 높은 효과를 강조한다. 결국 노동법이 개악됐지만 운동 참가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주류 언론은 잘 보도하지 않지만 올해 1~4월 프랑스에서 파업으로 말미암은 근로손실일수가 2백만 일에 이를 정도로 큰 것이 그 방증이라고 한다.

한편, 주디첼리는 프랑스 좌파가 단결해서 나치 정당인 국민전선의 성장, 무슬림 혐오와 인종차별의 확산에도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프랑스 좌파가 정치적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세속주의에 대한 오해로 무슬림 혐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점, 국민전선을 나치로 보지 않는 분석을 지적했다.

그래도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올해 3월 19일에 열린 파리 집회에 1만 5천 명이 참가했는데 이는 몇 년 새 가장 큰 규모라면서, 프랑스에서도 인종차별과 나치의 부상에 맞선 투쟁이 크게 건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1995년 대중 파업으로 국제적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일으킨 프랑스 운동이 취약한 마크롱 정부 하에서 다시 한번 전 세계 노동자와 좌파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되기를 바란다.

정의당이 노동계약을 공약한 마크롱의 승리를 환영한 것은 유감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프랑스 총선 결과에 환영 논조의 논평을 냈다(2017년 6월 19일자).

급진좌파 장뤽 멜랑송의 선전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새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과 그의 신당 ‘전진하는 공화국당’(레퐁블리크 앙마르슈)의 승리를 환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의 변화 열망에 따라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키며 당선됐다. 그가 만든 신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것 또한 기존 거대 정당에 실망한 국민들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다.”

그동안 한국에서 우익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의 양당 구도 속에서 고군분투한 정의당의 처지에서 프랑스 정치

상황을 바라본 듯하다. “단 1석도 없던 신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는 점은 우리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는 마크롱이 전임 사회당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다는 점, 전임 사회당 정부의 총리 마누엘 발스 같은 인물이 ‘전진하는 공화국당’에 공천을 신청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마크롱 정부를 사회당 정부의 연속선 상에 있다고 봤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쩌면 마크롱의 정당이 크게 보아 사회민주주의 계열이라고 봤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마크롱의 정당은 사회민주주의에서 우파적으로 이탈해 미국 민주당과 비슷한 정당(노동조합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마크롱은 정의당이 지지할 만한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키며 당선”한 것이 전혀 아니다. 마크롱은 전임 사회당 정부의 장관으로서 노동계약을 밀어붙인 당사자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기존 거대 정당에 실망”했지만, 마크롱에게서 “새로운 정치”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정의당 논평도 밝히고 있듯이, 프랑스 총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백지표와 무효표가 10퍼센트나 나왔다. 마크롱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절반은 마크롱의 정책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더 나빠

보이는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마크롱에 투표했다.

무엇보다, 마크롱은 이미 대선 전부터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다짐했다. 법인세 인하, 정부 지출 축소,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 등이 대표 정책이다. 그것도 박근혜처럼, 국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당 친화적 노총으로서 사회당 정부 시절에는 투쟁을 자제한 민주노동자총연맹(CFDT)도 마크롱의 노동계약에 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마크롱 정부가 금세 위기에 빠지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시달릴 수 있음을 뜻한다.

대선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내걸어 2백만 표 이상을 득표한 정의당이 이런 정부에 기대를 걸고 지원을 보내는 것은 정의당을 지지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의당 당원인 제주대 서영표 교수가 “[정의당] 낡은 질서의 ‘정상성’을 앞장서서 옹호하고 … 빈곤한 상상력에 허덕이고 있다”며 “매일 탈당할 공리”를 한다고 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레디앙》 6월 21일치)

우파의 재집권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는 정서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정의당에 투표한 2백만 명의 뜻을 정의당은 무겁게 여겨야 한다.

금속노조·현대기아차지부의 ‘일자리연대기금’ 제안

임금 나누기가 아니라 투쟁으로 사측을 강제해야

박설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 등의 지도자들이 현대차 사측에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현대차 계열 사 지부 17곳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체불된 통상임금 채권에서 2천5백억 원을 내놓을 테니, 사측도 같은 금액을 보태 5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해마다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떼어 내어 1백억 원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돈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 제안의 취지다.

정규직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자 하는 정신은 좋은 일이다. 어쩌면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도에서 일자리연대기금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규직의 임금 일부를 떼어 내어 일자리연대기금을 만들자는 구체적 제안이 과연 현실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따져 봐야 한다.

첫째, 일자리연대기금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에 한참 모자란다. 그동안 추진돼 온 사회연대기금은 비정규직의 조건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반면, 사측의 책임은 덜어 주는 효과만 냈다.(본지 205호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의 사회연대기금 논란: 기업주들이 정규직 임금으로 생색내기 하는 걸 돕는 꼴’을 보시오.)

물론 이번 기금 규모는 5천억 원으로 이전 사례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밝힌 자체 부담금 2천5백억 원 조성 계획은 공상에 가깝다. 수년째 답보 상태인 미지급 통상임금을 협상으로 해결해 그 일부를 내놓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사측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몇 년째 통상임금 확대 요구를 묵살해 왔다. 그런 만큼 단호하게 투쟁해 사측을 압박해야 한다. 노조가 ‘일자리연대기금’이라는 명



진정한 연대는 사측과의 공동 기금이 아니라 투쟁에서 나온다

‘노사 공동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을 현대기아차 사측에 제안하는 6월 20일 금속노조 기자회견

분을 내세운다고 사측이 순순히 내놓지 않는 것이다. 당장 재계는 “기금의 재원인 통상임금 소송 임금은 전혀 실체가 없는 돈”이라며 “봉이 김선달식”이라고 잘랐다.

둘째, 민주노총의 주력 조직인 금속노조가 비정규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개선 효과도 미미한 ‘임금 나누기’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 등은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부문인 제조업 생산에 타격을 가할 강력한 힘이 있다. 이들은 조합원 대중 행동과 파업으로 자신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고, 이 힘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금속노조 지도부의 제안은 이런 투쟁을 회피하는 것이다. 투쟁으로 사측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이 사측에 양보함으로써 정몽구의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기 때문

이다. 이는 실제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정부와 사측의 ‘정규직 책임론’만 강화할 공산이 크다.

셋째, 그러므로 문제인이 일자리연대기금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양보 압박의 일환이라고 봐야 한다. 박근혜와 달리 노조의 “선제적 노력”에 대한 “감사”와 설득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말이다.

문제인은 6월 21일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금속노조 지도부의 제안을 반기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노사정)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즉,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할 정부와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려고 엉뚱한 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경기 불황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 살리기를 제 사명으로 삼는 문

재인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양보와 희생을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노동자들을 쥐어짜 이윤 회복을 꾀하려는 기업주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연대기금 제안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보다, 거꾸로 노동자들을 향한 지배자들의 양보·희생 압박에 길을 열어 주고 힘을 실어 줄 공산이 크다.

단결에 해로운

넷째, 일자리연대기금은 노동자들의 단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로운 효과만 낼 수 있다. 정규직에게도 비정규직 양산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퍼지면, 정작 연대를 건설해 나가야 할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투쟁의 김만 빼는 효과를 낸다.

게다가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지난 2년간 임금 총액이 3퍼센트가량 깎였다. 사측은 수익성 하락과 판매 저조 등을 이유로 올해 임금 인상 수준도 최대한 낮추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통상임금 확대분의 10퍼센트가량을 내놓자는 제안은 노동자들의 원망만 살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정규직의 임금 양보가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 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도 민주노총 한석호 사회연대위원장은 “(정규직이) 내 몫을 내놓으면 노동자 연대 의식을 높이고 투쟁 참여도를 높이는 선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측은지심”은 건강하지 못한 정서이지만, 이 문제는 제쳐놓기로 하자. 연대 의식은 건강한 정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동의 적(착취자)에 맞서 단결해 싸울 때 발현될 수 있다. 그럴 때 사용자에게 맞서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을 지킬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일자리연대기금은 노동자 몫을 늘리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파이를 놓고 노동자들끼리 아웅다웅하게 만든다. <노동자 연대> 신문이 누차 강조했듯이, 이는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에 갈등과 반목만 낳는다. 대표적으로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가 추진해 온 정규직 양보 제안(“나눔과 연대” 사업)은 일부 정규직의 보수성을 자극하고 노동자들의 연대 의식을 오히려 약화시켰다. 당시 한석호 사회연대위원장이 ‘아름다운 연대’라고 칭찬해 마치 않았던 바로 그 집행부가 노조 분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수를 꽂은 것은 결코 우연적 일탈이 아니다.

금속노조의 일자리연대기금 제안보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돈’이 아니라 ‘연대 투쟁’을 통해 사측을 강제하는 것이다.(물론 투쟁 기금은 행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 양보와 질적으로 다르다.)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쫓아내고 ‘연대’ 말하는 김성락 지부장의 위선

“10년 동안 한 노조 안에서 한술밥 먹던 식구들을 그렇게 내쫓아 놓고 이제 와 비정규직을 위한다고요? 참 어이가 없네요.”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의 일자리연대기금 제안을 두고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말이다.

김성락 집행부는 바로 얼마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와 투쟁을 비난하며 노조를 분리시켰다. 그래 놓고는 청년과 비정규직을 격정해 ‘대공장 정규직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양보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어이 없고 기가 찰 노릇이다.

김성락 지부장의 위선은 일자리연대기금의 효과는 물론이고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쫓아낸 ‘이기주의’로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조합원들의 임금 양보를 카드로 내세워 이를 피해 보려는 알팍한 꼼수로 보인다. 정규직 조합원들이 임금 양보에 반발하면 비정규직 연대 외면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려는 계산도 하고 있음 직하다.

알팍한

같은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비정규직)의 등에 비수를 꽂으면서 ‘사회

적 연대’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김성락 집행부의 노조 분리 추진을 비판했던 노동운동 지도자들과 <한겨레> 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일자리연대기금 제안을 두둔하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면죄부만 줄 뿐이다.

선진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은 “나눔과 연대”라는 허울 좋은 미사여구로 정규직 양보론을 폄하했던 김성락 집행부가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신하게 된 과정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그것이 원하청 단결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곱씹어 봐야 한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파업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교회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임금 인상과 정규직화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라

신정환

학교비정규직 노조들(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 6월 30일 하루 파업을 하고 서울로 상경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집회에 합류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9일에도 파업을 하고 각 지방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총 같은 사용자 단체나 우파 언론들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과도하다고 비난한다. 친문재인 인사들도 '지금 문재인 정부를 도울 때이지 흔들 때가 아니라며 파업을 못마땅해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려고 싸우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학교 현장에서 굶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해 온 노동자들은 의당 정규직화와 임금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

더구나 문재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선언했다. 학교비정규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정부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약 70만 명 중 35만 명).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허구"라는 노동자들의 지적이 타당한 이유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고 있다. 전체 학교비정규직의 40퍼센트에 이르는 학교회계 직원들의 압도 다수가 무기계약직인데, 정부 대책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방안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지만, 임금과 각종 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우긴 박근혜의 수법을 반복하지 말라

우 수준은 정규직에 한참 못 미친다. 학교 무기계약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평균 약 60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을 받기 때문이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무엇보다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진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2011년부터 급속수당의 일종인 장기근무가산금이 신설되고 인상돼 왔지만,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후 3년 차부터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상한 근속(18년)을 넘으면 추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이 따른다.

10년 차 노동자의 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비교하면, 학교비정규직도 정규직의 2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속수당 5만 원 신설(정규직 공무원의 50퍼센트 수준)을 파업의 핵심 요구로 외치는 이유다.

무기계약직의 한계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무기계약직의 한계를 그 누구보다 몸서리칠 만큼 느껴왔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똑같고 승진, 승급조차도 없는데 무기계약직을 어떻게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 선언문 중)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교

육부는 1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신규 채용 시 무기계약으로 채용할 것을 지침으로 발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율은 41.6퍼센트이고, 신규 무기계약직 채용 비율 15.7퍼센트다. 여전히 1년 단위 계약이 반복되고 있으며 교체 사용 관행도 그대로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돌봄 등에서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기간제법 제외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노동자들은 이런 조건을 개선하려고 투쟁에 나섰다. 학교에서부터 비정

규직을 철폐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교육재정 예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임금·조건 개선을 위해 과감하게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오래 요구해 온 교육공무직법 제정도 즉각 추진해야 한다.

2012년부터 매해 파업 투쟁을 벌이며 노동조건을 개선해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요구 쟁취를 위한 좋은 출발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시대에,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17년 전통의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 2017

7.20(목) - 23(일)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지금! 참가신청 하세요

marxism.or.kr

※ 웹사이트에서 참가비와 참가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facebook.com/marxism.or.kr

- ★ 나홀간의 토론의 장 ★ 차별과 불평등, 착취에 반대하는 토론
- ★ 청중 발언 시간 보장 ★ 노동자·청년·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토론

노동운동

- ★ 패널 토론 현 시기 노동운동과 좌파의 과제
— 문재인 노동정책, 민주노조운동 진단, 노동자 계급의 연대 방안
- ★ 1997년 IMF 이후 20년: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계급의 변화
-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어떻게 가능한가?
— 기아차 노조 분리와 교훈을 돌아보며
- ★ 문재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 ★ 학교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 쟁점과 해법
- ★ 노동운동은 재벌개혁을 요구해야 하는가?
-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 ★ 실업과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현실, 대안은 무엇인가?
- ★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
- ★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 한국 정치의 전환점
- ★ 갈림길에선 철도 민영화, 공공철도로 가는 길은?
- ★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가?

※ 웹사이트에서 60개 주제와 수십 명의 연사를 확인하세요.